



##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 · 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서보혁 지음, 진인진, 2017

---

저자 (Authors)	장철운
출처 (Source)	<a href="#">시민과세계</a> , 2018.1, 249-259 (11 pages) <a href="#">Citizen&amp;the World</a> , 2018.1, 249-259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a>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8161">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8161</a>
APA Style	장철운 (2018).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시민과세계, 249-259.
이용정보 (Accessed)	참여연대 211.119.***.203 2018/02/13 09:3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서보혁 지음, 진인진, 2017**

장 철 운\*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와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1987년 전면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되는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고 저지하기 위한 2만6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100명에 달하는 병력을 12개 국가에 파견하고 있다. 광복과 6·25전쟁 등을 거치며 파병을 받았던 국가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세계 각지로 파병하는 상황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국군 파병 역사에서 베트남 전쟁 파병과 이라크 전쟁 파병은 가장 주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두 사례는 파병 기간과 규모 측면에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iron2798@kyungnam.ac.kr

서 다른 사례에 비해 압도적이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1964~1973년 동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연인원 32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또한, 이라크 전쟁에 2003~2008년 동안 연인원 1만7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다음으로 두 사례 모두 미국의 요청에 의해 참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사전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개입했던 전쟁으로, 한국은 한미관계를 감안해 참전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끝으로 이라크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해 철수해야 했고,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국을 위시로 한 연합군이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탐닉하기 위해 벌인 소위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서보혁은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를 통해 이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보여주며, 앞으로 한국의 파병정책이 어떻게 논의·결정돼야 하는지를 제언하고 있다. 이 글은 『배반당한 평화』에 관한 서평으로서, 저자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쫓으며 파병 및 평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파병의 목적과 결과: 이익 vs. 평화

저자는 책을 시작하며,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한국이 파병한 현실적 이유가 미국의 요청과 한미동맹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파병하는 현지의 회복, 나아가 세계평화는 단지 명분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기존 관련 연구는 파병이 평화와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이익 담론 혹은 위로부터의 시각에 간혀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국제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화운동과 평화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가 인식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또는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구목적 가운데 하나와 연결되는데, “한국의 베트남, 이라크 파병이 ‘평화’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파병이 구체적으로 한반도와 한국 사회, 파병 현지의 평화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파병 사례를 파병정책 결정요인, 결정과정, 결정, 결정이 미친 영향으로 구분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하며, 이 틀에 맞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을 통해 대북 억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동맹국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얻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많지 않으며, 특히 국내정치적으로 지지세력이 이탈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후 또는 인과관계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가 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베트남 전쟁 파병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파병을 결정한 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에 국군 현대화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견은 미국의 요청이 없었던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한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그리고 6·25전쟁을 거치며 급속하게 증가한 국군 병력 감축을 미국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승만·박정희 정부는 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국군 현대화 지원은 6·25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응해 이승만·박정희 정부가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즉, 박정희 정부가 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한 것은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견하는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인 해석이거나 파병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가 주요하게 다뤄왔던 정부 내 논의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파병반대 움직임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분석틀을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전쟁 파병 결정 과정에도 가급적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인 동시에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로 대표되는 여론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관심을 갖는 정부 내 논의 과정이라는 암상자(Black Box), 즉 파병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를 조율하며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저자가 박정희·노무현 정부를 외부 환경 및 결정자의 능력 등으로 인한 제약 내에서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암상자에 대한 이해 제고는 애초에 의도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국군을 각각 파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독한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역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반도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박정희·노무현 정부와 달랐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린든 존슨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파병 요청에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면, 즉 한국이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

지 않았다면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했을지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안보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견해 박정희 정부는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정치·사회적 이익을 거뒀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100%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박정희 정부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를 근거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증진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기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향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으로 한반도는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한·미가 북한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도발을 더욱 대담하게 감행했을 수 있다.

저자는 “같은 파병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를 향한 것”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에 당사국들을 끌어내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부응”했다고 설명한다. 참여정부 역시 5년간의 국정운영 상황을 종합·정리해 2008년 초에 발간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제5권 ‘통일·외교·안보’ 편 등을 통해 이라크 파병이 “지난 50년간 지속돼 온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3일 자이툰 부대 철군 시한 연장 과 관련한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6자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맺어가는 국면에 있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에게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는 연계된 것이었지만, 부시 행정부에게 있어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전쟁이고 북핵문제는 북핵문제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 대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유일 패권국이 핵무기로 핵 개발을 시도하는 ‘악의 축’을 공격할 뜻을 누그러뜨리는데 보탬이 됐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6자회담이 성립해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또한 “파병을 포함한 한국의 친미 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제한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 역시 향후 재평가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적극적인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라크 전쟁 파병이 6자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의 파병이 한반도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 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파병이 한반도와 한국 사회의 평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현지에 파멸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표현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전쟁 자체의 부당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더러운 전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두 전쟁에 파병하며 얻은 이익과 평화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파병이라는 그 자체의 행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는 어렵다.

저자는 베트남 전쟁의 파병에 관한 정부의 긍정적 평가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 파병이 야기한 부정적 결과를 검토한다. 특히,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30년 가까이 지난 1990년대 후반이 돼서야 우리 내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며 “베트남 전쟁 그 자체와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인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반성한다. 우리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가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한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명분이 ‘평화정착·재건지원’이었다며 “한국만큼 현지의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라크에 파견된 부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재건지원활동 내역을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파병은 ... 미국의 파병 요청이 일차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침략전쟁, 심지어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며 파병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한국의 베트남 전쟁 및 이라크 전쟁 파병은 한반도와 한국 사회, 파병 현지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총평할 수 있다.

### 3. 이라크 파병반대운동과 바람직한(?) 파병정책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대통령 또는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는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체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서 대통령 또

는 정부의 결정 사안에 대한 반대는 곧 ‘이적(利敵)’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는 민주화 이전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성역으로 여겨지던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했다. 통일·외교·안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비판적으로 태도로 접근하는 시민단체가 생겨났으며, 이들은 여론을 주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며 태동한 시민사회는 형성 초기 정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평화’와 같은 당위론을 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권력 구조 앞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사회에 전개된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 운동은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시기 파병반대운동은 ‘파병 반대 = 보편가치 증진’이라는 이상주의적 주장에서 탈피해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이라크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파병 찬성 측과 치열하게 논쟁했다. 저자는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에 관해 “한국정부의 파병을 저지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파병 부대의 임무, 파병 시기와 주둔지 등에 걸쳐 정부의 파병 결정을 최대한 신중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파병부대가 한 번의 전투 없이,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평화정착·재건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평가하는 바탕에는 파병반대운동 진영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제5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의 가치관과 부합성 여부, 국가이익 도모, 국민적 합의, 이라크 요소,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핵심적 사항으로 고려했다고 전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고 파병결정 시 국론분열이 아닌 국론통합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당시 다수 국민들이 전투병 파병에 비우호적 입장을 보였고 전투부대 파견 시 대규모 반정부·반미 시위를 촉발하여 오히려 한·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당시 국내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연일 파병반대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열렸고, 정치권 일부에서도 ‘반전평화모임’을 결성해 파병반대에 나서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국회 연설에서 “정치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왔”다며 “그런 제가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이툰 부대 파견 경위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전문가, NGO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파병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며 “일련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하면서도 “파병부대의 성격·형태·규모·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결정했다.

저자는 한국 사회 전반과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라크 전쟁 파병 관련 찬반 논쟁이 “노무현 정부가 그것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며 파병 방식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됐고, ‘노 대통령이 2,000~3,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 파병을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높아지는 파병반대여론을 활용해 미국과의 파병 협상 절차를 세분화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윈셋(win-set)을 조정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

의 현실주의가 기성 현실주의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결국 현실 정치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은 ‘한국에서 발육이 부진했던 평화운동’이 “통일운동과 분리해 본격적인 출발을 보여준 일대 사건”으로 “분단 속에서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성과였다”고 찬사를 보낸다.

한편, 저자는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을 심도 있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파병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세계 패권국 미국의 요청을 꼽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베트남·이라크 전쟁 파병은 “반공, 반테러리즘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동참하며 이익을 추구한 것”이었으며 “세계 패권국의 하위 파트너인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저자도 확인하고 언급한 것처럼, 한국이 베트남·이라크 전쟁에만 파병했던 것은 아니며 규모와 기간 측면에서 베트남·이라크 전쟁 파병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되는 UN PKO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람직하다’는 가치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파병’이란 ‘평화주의적 파병’인 것으로 이해된다. 저자는 평화적 파병과 평화주의적 파병을 개념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평화주의적 파병이 수단(최소한의 무기 소지), 목적(전투가 아닌 평화유지), 조건(특정 세력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중재자)을 주요 구성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가장 가까운 평화주의적 파병의 사례가 한반도에 존재하는데,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쌍방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의 이러한 규정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

자가 언급하는 것과 같이 “대규모 인권침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학살 등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특정세력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긴급한 파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국가의 보호책임)’, 즉 국가가 반인도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이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과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면 어느 방안이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R2P를 내세우며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리력이 다른 인명 살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 나가며

서보혁의 『배반당한 평화』는 한국군 파병과 관련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전쟁 파병과 이라크 전쟁 파병을 때로는 직관적으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특히,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해 한국 사회 내에서 진행됐던 파병반대운동이 정부의 파병 정책 추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기존 연구와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운동은 발육부진 상태였던 한국 사회 내의 평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발시켰다. 이처럼 『배반당한 평화』는 자칫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목적적일 수밖에 없는 ‘파병’과 ‘평화’를 논리적·현실적 측면에서 제대로 연계시키는 데 기여하는 역작이다.

끝으로,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또는 못하는) 한국이 해외의 여러 분쟁에 군대를 파견하는 현실의 아이러니,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가 발전시켜 가는 민주주의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